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| <h1>보도자료</h1> | 2015. 12. 9(수) | |
| | | 작 성 문 의 |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장 민성호 (Tel. 044-200-2341) |
| 9일 10시(회의종료) 이후 사용 | | | |
| ※ 관계부처 : 안전처 안전총괄과장 유재욱(02-2100-0413) | | | |

“안전한 대한민국” 을 위해 안전 패러다임 바뀌어야

- 황 총리, ‘제5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’ 겸 ‘제6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’ 주재
 - “안전을 정책 최우선 가치”, “예방 중심”, “현장 중심” 및 “사회적 인식 개선” 당부
-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‘제5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’ 겸 “제6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”를 열어
 - 지난 1년간 정부의 안전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
 - 황총리는 취임 이후 ‘안전총리’를 지향하며 메르스 현장, 산업단지·학교시설 등 각종 현장(총44회)을 점검하고
 - ‘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’를 개최(5회)하여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에 대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
 - 오늘 회의에서 황총리는, “정부는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”면서
 - “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는 작년에 비해 주요 안전사고(교통, 산재, 화재 등)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,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도 활발해지는 등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”고 평가하였다.
 - 그러나 황총리는 “여전히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는 개선되고 있지만, 여전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”면서,

- “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도약하고, ‘안전한 대한민국’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□ 이러한 차원에서 황총리는 ‘국민안전’에 대한 네가지 원칙을 밝혔다.

- 첫째, 각 부처는 안전을 “최우선가치”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.

-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
- 정부와 정책의 성공은 안전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것임
-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안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

- 둘째, 안전정책은 “국민 중심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
- 안전은 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“불안요인”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
-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임

- 셋째, 안전정책은 “현장 중심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.

- 안전의 핵심은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임
-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,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
- 또한 안전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끊임 없는 점검과 보완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함

- 넷째, 안전을 위해서는 “사회적 인식의 개선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
- “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”라는 인식전환, “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지킨다”는 안전의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

- 황총리는 마지막으로 “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‘안전한국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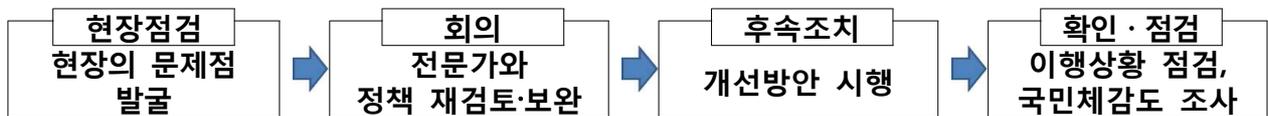
-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처가 ‘안전혁신 1년 및 중점 추진과제’를, 고용노동부는 ‘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성과’를, 해양수산부는 ‘해양선박사고 표준매뉴얼 개선성과’를 대표로 보고하였으며, 국무조정실은 ‘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’을 보고하였다.

「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」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

□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경과

- (추진배경)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, 구체적 실천을 위한 관리체계로써 「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」 신설(15.7)
- (운영방식) △부처와 민간전문가 참여, 분야별 안전정책 종합검토·보완 △안전과 연계한 현장방문·점검 병행
- (추진현황) 총리취임 이후, 국민안전 소분야의 안전대책 점검 지속
 - 그동안 총 5차회의, 11개 분야 안전대책 논의, 44차례 안전현장 점검

⇒ 안전정책 현장 실행력 제고 및 국민체감 성과 향상



□ '15년 주요 추진성과 (대표 개선사례)

- (교통안전)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3개월 특별대책 추진(9~11월), 4대 고질적 법규위반* 단속 및 처벌 강화
 - * 신호위반·꼬리물기·끼어들기·지정차로 등

※ 교통사고 사망자 수 77년 이후 38년만에 최저수준
- 11.19 기준,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대비 2.9% 감소
* '14년 4,162명 → '15년 4,043명, -119명

- (하청근로자 안전)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, 원청을 하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 상향 ('15.11.16, 개정법령 환노위 상정)
 - 원청의 안전조치 대상 확대
 - * 20개소 → 원청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있는 모든 장소
 - 원청을 하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 상향
 - *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→ 일반재해 발생시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,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
○ (시기별 안전) △여름철 식품안전, 추석절 안전 등 선제적 조치로 사고율 감소

* 식중독발생 현황: ('14.10월) 6,504명 → ('15.10월) 4,981명

* 추석연휴 사고 사망자 수 - 교통사고('14년 57 → '15년 29), 화재('14년 4 → '15년 0)

○ (야영장 안전) 불합리한 규제 개선, 안전과 건전한 야영문화 조화

| (당초) | (개선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및 화기 사용금지 | 천막당 600와트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 허용 |
| LPG 가스용기반입 금지 | 13kg 이하 LPG 용기의 예외적 반입 허용 |

※ 미등록 야영장 처리기준 마련을 통한 등록 활성화

- 야영장 등록률 : ('15.7월) 23% → ('15.10월) 49%

□ 향후계획

○ 선제적 안전관리로 “재난예방”에 집중

*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차질없는 이행 점검·관리, 국가안전대진단 내실화

○ 재난대응역량 강화로 재난시 “국민피해 최소화”

* 기관별 역할·책임 명확화, 현장중심 매뉴얼 반복 훈련, 재난인프라 지원

○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운동 강화

* 안전문화운동 활성화, 지역안전지수 등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 제공 확대

○ 「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」 지속 운영

* 지하시설물, 교량 등 기반시설 등 분야별 취약요인 지속 발굴 및 개선, 현장방문 병행으로 국민체감도 제고